

긴급 현안분석 세미나

한미일 3국 정상회담 의미·성과·과제

2023. 8. 22. 화 13:00~14:40

국회 본청 228호

패널

| 좌장 신원식 국민의힘 국회의원(국방위 간사)

| 토론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前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이상현 세종연구소 소장

전성훈 경민대 겸임교수(前 통일연구원장)



〈긴급 현안분석 세미나〉

“한미일 3국 정상회담: 의미, 성과, 과제”

□ 개 요

- 일 시: 2023년 8월 22일(화) 13:00~14:40(100분)
- 장 소: 국회 본청 228호
- 주 최: (재)여의도연구원 외교안보센터
- 참석자
 - 좌장: 신원식 국민의힘 국회의원(국방위 간사)
 - 패널: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前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이상현 세종연구소 소장
전성훈 경민대 겸임교수(前 통일연구원장)

□ 계획안

시간		일정
13:00 ~ 13:05	5'	○ 개회 및 국민의례
13:05 ~ 13:20	15'	○ 대표 인사말씀 및 내빈 소개
13:20 ~ 14:20	60'	○ 토론회 - 좌담회 형식 자유토론
14:20 ~ 14:40	20'	○ Q&A 및 종합토론
		○ 폐회

[긴급 현안분석 세미나]

한미일 3국 정상회담: 의미, 성과, 과제

토 론 문

남 성 욱

[前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韓美日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 성과와 향후 과제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 前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1. 의미와 성과

□ 의미: A+ 학점

○ 한미일 협력의 정례화와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 시작

- 한미일이 공유하는 핵심가치를 기반으로 역내외 자유와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새로운 수준’의 강력한 협력틀을 구축
- 한미일 3자 협력체가 인태(印太)지역내 소다자 협력체로서 뚜렷한 독립성을 구축하는 ‘새로운 삼각 다리(new triangle bridge)’의 뉴노멀(new normal)을 창출함
- ※ 나토(NATO) 수준은 아니지만 향후 쿼드(QUAD), 오키우스(AUKUS) 형태로 발전할 연대를 형성

○ 3국 정상이 한미일 정상회의만을 위해 따로 모인 첫 사례

- 캠프 데이비드 이전까지 한미일 정상회의는 1994년 출범 이후 총 12회 개최, 모두 국제 다자회의 계기에 개최
- 별도의 특별회담을 계기로 새로운 ‘세 나라 파트너십의 새로운 시대’(a new era of trilateral partnership)의 서막이 열림

○ 캠프 데이비드라는 역사적 장소에서 자유의 시대정신 구현

- 캠프 데이비드는 역사적으로 주요국 정상들이 모여 중요한 합의를 도출했던 장소로 현대 외교사에서 갖는 상징성이 매우 큼
-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는 3국 정상 간 한미일 협력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돈독한 신뢰·유대관계를 형성하면서 자유라는 가치가 핵심인 시대정신(zeitgeist)을 반영

□ 한미일 정상회의 핵심성과

① 한미일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 핫라인 구축

- 정상 간 공동성명에 더해 3국 협력의 추진 원칙을 문서로서 합의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 채택
-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위협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세 나라가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한다는 약속을 함
- 조 바이든 대통령 공동기자회견에서 “역내에 위기가 발생하거나 우리 중 어느 한 나라라도 영향을 받을 때마다(whenever) 이것에 대해서 즉각 협의하기로 공약하고 핫라인을 만들겠다는 것” 언급
- ※ △캠프 데이비드 정신, △원칙,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 한미일 중 한 국가를 겨냥한 위협이라도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affecting our collective interests and security)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인식
-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위협에 대한 대응을 신속하게 협의, 정보공유, 메시지 동조화, 대응조치 조율, 3자 간 정기적이고 시의적절한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구축
- ※ 지역도 분야도 전방위적으로 확대(whenever). 한반도는 물론 남중국해와 태평양도서국(태도국)을 포괄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체가 대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전 세계 안보와 경제에 타격을 주듯이 세 나라의 이익이 걸린 글로벌 현안은 어떤 것이라도 협의 대상(whatever)이 될 수 있음
- 한미일 협력 역사상 최초로 △한미일 정상회의 △외교장관 △국방장관 △상무·산업장관(신설) △국가안보실장을 포함한 고위급에서의 협의체 연례화 (최소 연 1회 개최)
- ※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 출범

② 역내 평화와 번영 수호를 위한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협력체 진화

- 군사안보는 물론 문서에 표현된 ‘지역적 도전, 도발, 그리고 위협 (regional challenges, provocations, and threats)’은 분야를 한정하지 않은 다양성(whatever)을 의미함.
- [안보] △전례 없이 고도화되는 北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3국 안보 협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對北 공조를 한층 공고화 △정보공유 및 허위정보 대응을 위한 조율 강화

※ 한미일 정상이 함께 국군포로, 자유통일, 한반도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공식 언급하는 것은 이번이 최초

- [경제안보/첨단기술] 작년 11월 프놈펜 성명을 토대로 수립된 한미일 NSC간 경제안보대화를 통해 경제안보 및 첨단기술, 금융시장 관련 협력
- 역내외 통상 분규 등 경제적 마찰에 대해서도 세 나라가 즉각적인 대처에 나섬과 공조를 지속 강화
- (공급망) 핵심광물, 2차전지를 포함한 핵심품목 공급망 리스크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3자 간 조기경보시스템 협력체계 구축

③ 한미일 정상 간 돈독한 신뢰·유대관계 형성 및 소통채널 구축

- 지난 4월 국민 방미 이후 4개월 만에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되어,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 비전을 이행하기 위한 협력 방안 구체적 논의로 글로벌 중추 국가로 부상
- 한일 양국의 관계 개선 노력으로 올해에만 벌써 5차례 정상회담 개최,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가속화 의견 일치 등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

2. 이행과제

○ 3국 협력의 진전을 제도화 등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확보

- 향후 국내정치 일정에 상관없이 한·미·일 3국의 협력이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갖기 위해서는 각론에서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불가역적인 협력 방안을 보다 구체화해야 함

○ 북한의 군사적 도발 및 중국의 ‘한국 흔들기’에 효율적 대응

- 북한의 핵 도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워싱턴 선언에서 합의한 NCG(핵협의체)의 실효적인 가동을 통해 효율적인 대응태세 구축
- 공동성명은 “국제 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는 기존 입장에 더해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고 중국을 직접 명시하고 북한보다 앞부분에서 언급
- 중국은 한·미·일 정상회의에 앞서 안전보장 분야에서 연계를 강화하는 한국·미국·일본의 움직임에 경계하는 메시지 발표
- 중국은 한 편으로는 우려와 불만을 표시할 것이며, 다른 한쪽으로는 동맹의 균열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 약한 고리인 한국을 겨냥하여 압박과 회유의 대한(對韓) 외교를 전개할 것으로 예상

※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월 18일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지정학적 다툼의 장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20일 “한국은 미국패권의 바둑돌이 되어서는 안된다.”

- 전략적 좌표 이동에 마찰은 불가피하고, 그걸 최소화시키는 게 외교 역량임.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반목하지 않으면서 북핵 해결을 위한 건설적 역할로 이끌어야 하는 만만찮은 과제를 안고 있음

- 한중 양자 소통을 통해서 오해를 방지하면서 중국의 ‘한국 흔들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등 대중국 균형 감각으로 상호존중의 한중관계를 구축

○ 일본의 대한(對韓) 협력 강화 유도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한일간에 민감한 문제에 대한 관리 강화 등으로 한미일 3국 간 제도화되는 협력이 한일 간에 이견으로 차질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한미 및 한일 간 입체적인 협력을 유도하여야 함

※ 3국 협력의 성패는 한일관계 개선에 좌우될 수 있는 만큼 일본을 설득하는 미국의 역할이 중요함

- 윤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등 적극적인 한일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일본 역시 호응하는 자세를 보여야 협력의 동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임

○ 국내 대국민 소통 및 홍보 강화

- 총론적으로는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나 후속 조치를 정교하고 장단기 국익 개념에 맞게 관리하지 않으면 획기적인 외교 노력이 국내정치의 정쟁 요소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국가이익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의미는 무엇인지 등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소통과 홍보를 강화해야 함
- 향후 윤석열 정부 임기는 물론 지속적으로 우리 외교협력의 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국내정치에서 불가역적(irreversible)인 외교아젠다로 위치를 확보해야 함

[긴급 현안분석 세미나]

한미일 3국 정상회담: 의미, 성과, 과제

토 론 문

이 상 현

[세종연구소 소장]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정상회담 성과와 평가

이상현(세종연구소장)

1.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정상회담의 의의

- 한·미·일 3국 정부는 지난 8월 18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담을 개최
 - 캠프 데이비드는 수도 워싱턴DC에서 북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메릴랜드주에 있는 대통령 휴양지로 과거 미국 대통령들이 세계 지도자들을 초청해 역사적 합의를 끌어낸 장소로도 유명
 - 1959년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소련 니키타 흐루쇼프 서기장과 회담을 가졌고, 1978년 9월 지미 카터 대통령의 중재하에 이스라엘의 메나헴 베긴 총리와 이집트의 안와르 사다트 대통령이 중동평화안에 합의한 장소
 - 외국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를 방문하는 건 바이든 행정부 들어 처음이고 2015년 이후 처음 - 한국 대통령으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8년 4월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초청으로 처음 방문했으며, 윤 대통령이 역대 두 번째로 15년 만에 다시 방문
 - 이런 상징성을 갖는 장소인 만큼 한·미·일 3국 정상회담 내용도 그만큼 중요한지가 관전 포인트

- ‘자유의 연대’ 정점을 찍는 정상회담
 - 취임 1년이 지난 윤석열 정부는 3월 한일정상회담, 4월 한미정상회담, 5월 히로시마 G7 정상회담, 7월 리투아니아 빌니우스의 나토 정상회의, 그리고 이번 캠프 데이비드에 이르기까지 굵직굵직한 외교 행보를 이어왔음.
 -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담은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추구해온 ‘자유의 연대’ 정상외교의 일단락을 짓는 회담이라 평가할 수 있음
 - 실상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은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서 오랜 숙원 - 미국은 한국, 일본과 모두 동맹 관계에 있으나 한일간 과거사 문제, 동북아 정세 대응 기조 차이 등의 문제로 인해 한·미·일 3국간 협력은 그동안 제한적인 형태로 진행
 - 한·미·일 협력에서 한일은 항상 ‘약한 고리’라는 평가를 면하지 못해왔고, 그동안 아세안 정상회의 등 3국 정상이 모두 참석하는 다자 무대에서 약식 혹은 사이드 이벤트로 열리던 한·미·일 정상회의가 별도로 열린 것 자체가 큰 의미
 - 3국 정상 간 격의 없고 친밀한 대화를 갖기 위해 형식이나 주제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리트리트’ 형식으로 진행되어 정상 간 좋은 케미스트리를 형성하는 데 기여

2. 정상회담 주요 성과: 3개의 합의 문건 내용과 평가

- 3국 정상 공동성명, 캠프데이비드 정신(The Spirit of Camp David) - 3국 협력의 비전과 방향성을 제시
 - 모든 영역과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에 걸쳐 3국 협력을 확대하고 공동의 목표를 새로운 지평으로 높이기로 약속
 - 경제를 강화하고, 회복력과 번영을 제공하며, 법치에 기초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 질서를 지지하고, 특히 현재 그리고 차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으로서 지역 및 글로벌 평화와 안보를 강화
 - 민주주의를 증진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공조를 강화
 - 한미동맹과 미일동맹 간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고, 3국 안보협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격상
 -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그리고 위협에 대한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서로 신속하게 협의한다는 3국 정부의 공약을 발표 - 이러한 협의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메시지를 동조화하며, 대응 조치를 조율

- 캠프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 - 한미일 협력의 구체적인 지침
 - 3국간 파트너십 및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에 대한 공동의 비전을 확인 - 3국 파트너십은 공동의 가치, 상호 존중, 그리고 우리 3국과 지역, 세계의 번영을 증진하겠다는 단합된 약속의 토대에 기반
 - 한미일은 인도-태평양 국가로서 국제법, 공동의 규범, 그리고 공동의 가치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계속해서 증진
 - 힘에 의한 또는 강압에 의한 그 어떠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
 - 3국 안보협력의 목적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고 증진하는 것
 - 아세안 중심성 결속 지지, 태평양도서국 협력체와 협력,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공약 견지,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재확인, 개방적이고 공정한 경제 관행, 접근 가능하며 안전한 기술 접근법, 기후변화 대응, 유엔헌장의 원칙-특히 주권, 영토 보전,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무력 사용에 관한 원칙-수호, 핵비확산 공약 준수 등

- 3국협의 강화 공약(Commitment to Consult)
 -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그리고 위협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조율하기 위하여, 각국 정부가 3자 차원에서 서로 신속하게 협의하도록 할 것을 공약
 - 이러한 협의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메시지를 동조화하며, 대응조치를 조율
 - 3국은 자국의 안보 이익 또는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자유를 보유

- 백악관의 Fact Sheet에 의한 주요 성과 정리
 - 3국 고위급 협의 정례화 - 신속한 협의, 연례 정상회담, 외교·국방·상무·안보 장관 연례회의, 3국 인도태평양 대화 연례화
 - 안보협력 강화 - 다년간 3국 군사훈련, 미사일 방어 협력 개선(정보공유, 실시간 미사일 경계 데이터 공유), 북한 사이버공격에 대한 3국 워킹그룹, 정보공유 및 조율 강화, 해외로부터의 정보공작 공동 대응
 -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 확대 - 3국 개발금융 협력, 해양안보 협력 프레임워크, 개발 및 인도적 지원 정책대화
 - 경제 및 기술협력 심화 - 여성 역량강화, 공급망 조기경보체제(EWS, Early Warning System) 출범, 국책연구기관 협력, 기술 교란 방어 네트워크, 기술표준 협력
 - 글로벌 보건 및 인적교류 협력 - 캔서 문샷(Cancer Moonshot) 협력, 3국 글로벌 청년리더십 정상회의, 기술 리더십 훈련 프로그램

- 윤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 모두 발언에서 캠프데이비드 회담이 한미일 안보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
 - 한·미·일 정상회의 정례화, 3국의 외교장관·국방장관·국가안보보좌관을 포함한 각급 인사들이 각 분야에서 매년 만나 3국간 협력 방안을 긴밀히 조율
 - 차관보급 ‘한·미·일 인태 대화’를 신설, NSC 주도로 운영 중인 경제안보 대화와 함께 개발원조 정책 공조를 위한 협의제도 창설
 -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3국간 방어훈련 중요성에 공감, 연간 계획에 따라 한·미·일 공동훈련을 실시

3. 향후 과제와 전망

- 그간 윤석열 정부의 외교 행보를 보면 두 가지 특징을 보여왔는데, 첫째는 한국의 가치외교 정체성 부각
 - 윤 대통령 본인 스스로 쓰는 언사들을 보면 자유, 평화, 법치, 인권 등 가치에 기반한 개념들이 많고, 윤 정부는 가치외교에 기반한 외교정체성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
 - 둘째는 전략적 모호성보다는 전략적 투명성을 제고 - 한국의 역대 정부들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결정하기 불편한 사안에 대해서는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명분하에 명확한 입장 표명을 유보하는 태세를 취했지만, 윤 정부는 미국, 일본 등 우리와 체제와 이익을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공조를 확연히 강화

- 세계질서가 안보와 경제 모두에서 유례없는 혼돈과 불확실성으로 가득찬 시대에

- 한국이 가치와 국익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는 것은 당연하며, 현 국제정세의 특징과 안보적 맥락은 크게 세 가지 추세로 요약 - 파편화와 진영화의 동시 진행, 그로 인한 전략적 불확실성의 증대
- 파편화와 진영화 추세 속에 세 개의 세계로 쪼개지는 분열선이 뚜렷 - 프린스턴대 학교의 존 아이켄베리(G. John Ikenberry) 교수는 향후의 국제질서가 세 개의 세계로 나뉘지면서 이 형태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
 - 글로벌 웨스트는 미국과 유럽의 민주주의 진영이 주도, 글로벌 이스트는 중국, 러시아가 주도, 글로벌 사우스는 인도 및 브라질이 주도하지만 기타 다양하고 비정형적인 비서구 국가들이 모인 그룹
 - 세 개의 세계는 블록도 아니고 응집력을 가진 집단도 아니며, 고정되거나 공식적인 정치체가 아니라 느슨하게 구성된, 진화하는 글로벌 차원의 분파
 - 현재의 국제질서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글로벌 웨스트와 글로벌 이스트 간의 경쟁과 대결
 - 여기에서 한국이 글로벌 웨스트와 협력하고 공조하는 건 당연 - 문제는 그로 인한 리스크와 후폭풍, 특히 글로벌 이스트로부터 올 압박과 견제를 어떻게 대비할 것 인지가 향후의 과제
- 첫째, 한국 외교의 가치 정체성과 전략적 투명성 증대로 인한 중·러로부터의 후폭풍에 대비
- 최근 한중관계는 최악의 상황 - 중국은 그 원인이 한국이 변했기 때문이라고, 즉 한중관계를 희생시켜 미국 편에 올린 것이 원인이라고 주장,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국을 비우호국으로 지정
 - 중·러에 대해 가치와 시장을 구분해서 접근하는 해안이 필요한 때 - 특히 중국의 경제 강압외교에 대비
- 둘째, 한국이 글로벌 웨스트와 연대할수록 북·중·러 연대도 강화되는 건 불가피하며, 그로 인한 위기관리의 중요성 증대
- 지난 7월 27일 북한의 소위 '전승절'(정전협정체결일) 70주년 행사는 핵·미사일 정책에 일체 변화가 없다는 사실과 북·중·러 밀착 연대를 내외에 적극 과시한 것으로 평가
 - 이날 밤 개최한 열병식에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과 리홍중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한 것은 북·중·러 연대가 고착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이는 한반도의 긴장 완화 및 위기관리가 더욱 중요해짐을 의미
 - 시진핑 주석은 캠프데이비드 정상회담에 대해 '전방위 봉쇄, 포위 및 압박'을 시작한 것으로 해석하며, 다수의 중국 전문가들이 이를 새로운 냉전의 시작으로 해석
- 셋째, 파편화된 질서 속에서 진영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혼란스런 국제질서 속에서

외교가 할 일은 리스크 분산이 핵심 과제

- 가치와 국익 사이에서 이를 어떻게 믹스한 국가전략을 펼칠 것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마련 - 중국과의 디커플링 대신 디리스팅을 선언한 유럽의 고민도 같은 맥락
- 외적인 경제적 충격이나 경쟁국의 정치·경제적 압박으로부터 견딜 수 있는 국가와 사회의 탄력성(resilience)을 어떻게 키울지가 중요한 과제
- 탄력성과 더불어 일정 정도 중복성(redundancy)도 필요 - 불필요해 보일지 몰라도 유사시를 대비한 중복 설비, 혹은 여분의 안보협력 기제와 공급망 역량을 비축하는 것이 포스트-팬데믹 시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방안

○ 넷째, 국제질서가 진영화로 재편되는 것이 추세라면 한·미·일 3국 협력을 정례화하는 한편, 한·일 양자협력을 지속가능한 플랫폼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구

- 한·일 공히 국내정치적 이유로 한일관계 부침을 겪었던 그간의 경험을 감안하면 한·일 차기 정부에서도 이런 협력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
- 이를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어젠다를 발굴하고 협력의 내실을 다지는 것이 중요 - 대만해협의 안정과 평화, 인태지역의 해양안보, 원자력 발전, 우주 개발, 공급망 협력, 반도체 등 첨단기술 등 협력 분야는 다양
- “한·미·일 3국간 협력 관계를 (조 바이든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총리 등) 세 지도자에게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 내재화되도록 해야 한다... (이번 회담의) 목표는 이 것(3국 협력이) ‘뉴 노멀’이 되게 하고 정보 및 안보, 정치, 외교, 경제 등 모든 분야에 이런 긴밀한 3국 관계를 엮어 미래의 어느 지도자도 이 관계를 과거로 돌릴 수 없도록 하는 것” (람 이매뉴엘 주일미국대사, 8월 16일 브루킹스연구소 세미나)

[긴급 현안분석 세미나]

한미일 3국 정상회담: 의미, 성과, 과제

토 론 문

전 성 훈

[前 통일연구원장]

한미일 3국 정상회담 : 성과와 과제

전성훈

(K-정책플랫폼 국제전략위원장/前통일연구원장)

주최: 여의도연구원

일시: 2023년 8월 22일

I. 3국 정상회담의 배경

● 미국: 바이든의 한미일 3국 협력 제도화 대못 박기

- "바이든 대통령은 3국이 확실하게 관계를 발전시키고 협력을 깊이 계속하는 데 강한 의지가 있으며 각국 지도자가 바뀌어도 관계가 후퇴하지 않도록 3국의 틀을 정착시키고 싶다고 생각한다" (커비 NSC 소통조정관, 교도통신 8.17)
- "인태지역의 전략적 환경을 바꾸고 21세기를 정의하는 3국관계가 될 것임" "3국간 협력을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도 자물쇠로 채우기 위한 (lock-in) 매우 야심찬 이니셔티브임" (캠벨 NSC 인태조정관, 브루킹스연구소, 8.16)
- "중국은 미국의 동맹인 한일이 서로 단결하지 않는다고 전제했지만 이제는 달라졌다" "동맹의 강력함 등에서 17일과 19일은 완전히 다른 날이 될 것임" "목표는 3국협력이 뉴노멀이 되어 안보, 정치, 경제 등 모든 곳에 뿌리내리고, 그 어떤 개인, 국가, 미래의 지도자도 이를 되돌릴 수 없게 하는 것" (이매뉴얼 주일

미국대사, 브루킹스연구소, 8.16)

- 일본: 미국의 대중경제 정책에 편승 및 안보 영역에서의 **보폭 확대**
 -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경제 정책에 편승하여 미국의 힘을 빌어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는 포석
 - 3국 안보협력 강화를 계기로 군사안보 분야에서 조용하고 조심스럽게 움직였던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활동의 폭을 확대하고 선명성을 극대화 ← **우익이 지향하는 "보통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정치적 포석**
- 한국: 한미동맹 강화 및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국정기조의 **적극적/절제된 구현**
 - "3국협력의 새로운 장을 연 21세기 외교사 현장으로 기록될 것이며, 3국 협의체는 인태지역 내의 협의체로서 뚜렷한 독립성을 갖게 될 것임" (김태효 안보실 1차장 브리핑, 8.13)
 - "3국의 안보/경제 협력의 역사는 8월 18일 이전과 이후로 나뉘게 될 것"

(김은혜 홍보수석, 대통령수방 브리핑, 8.17)

- "동맹은 일방이 공격당할 때 자동 참전하는 관계지만 한일은 아니다" "한미일을 3각 안보협력체라고 할 수 있어도 안보동맹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나토는 집단 안보동맹인데 한미일 협력체는 그렇게 나갈 수는 없을 것 같다" (대통령실 관계자, 중앙일보, 8.17) ← **미국도 같은 입장**
- MD 편입에 선을 그음: "MD는 동아시아 전체의 미사일방어망이나 한미일 협력은 북핵/미사일에 한정된 것이며, 우리 군의 능력으로 미일에 대한 위협을 방어할 수도 없다" (국방부 관계자 발언, 8.18)
- 『3자 협의공약』은 역내외 협력 강화에 대한 "정치적 약속"이며 의무라는 표현은 들어가지 않는다" "어떤 새로운 국제법적 의무도 부과하지 않으며 자국의 위협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협의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 발언, 8.18) ↔ **"3국의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나 위기가 발생할 경우**

협력할 의무(a duty to consult)라고 하는 것에 서약할 것이다”(백악관 고위 당국자 브리핑, 8.17)

II. 3국 정상회담의 성과: 기회요인

● 3국의 안보가 밀접히 연계되어 있음을 공개적으로 선언

- 한미일 3국의 안보가 연계되어 있는 현실을 인정하고 역내 안보위기 발생시 서로 협의할 것임을 대내외에 공개적으로 선언
- 동북아 안보 불안의 진원지인 북한과 중국에 대해 “한미일 편가르기”에 기대하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 발신

●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대내외에 각인

- 미국이 영국/독일/프랑스 등 서유럽 선진국, 아시아에서는 일본/호주 정도와 했던 전방위적인 협력의 장에 한국이 대등한 파트너로 참여함으로써, 한국의

높아진 위상과 국격을 국제사회에 각인

● 경제/공급망 분야에서 한국의 취약성을 보완할 제도 마련

- 3국 상무/재무장관 협의체를 통해 통화스와프 체결 등 금융/외환 위기에 대처하고, 3국간 투자/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기반 구축
- 핵심물품과 첨단소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므로써, 중국과의 정치/군사적 갈등으로 인해 우리 경제가 직격탄을 맞는 상황 예방

● “핵심신흥기술” 발전의 기회 창출

- AI, 양자 컴퓨팅, 신소재, 기후변화 등 21세기 첨단 산업발전을 주도할 핵심적인 과학기술 분야에서 3국 공동의 연구와 협력을 통해 우리의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 확보

Ⅲ. 향후 과제: 도전요인

● 고질적인 한일 쟁점과 현재의 정책 간에 괴리 해소

-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는 방위백서를 발간한 7월 28일 외교부와 국방부는 각각 주일대사관의 정무공사와 항공자위대 자위관을 초치하여 항의 ← **일본은 19년째 독도 영유권 주장**
- 8월 15일 태평양전쟁의 A급 전범 14명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에 기시다 총리를 비롯한 정치인/관료들의 공물로 봉납이나 집단 참배에 대해 외교부는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는 대변인 논평 발표
- 미국 인태사령부가 지난 2월 동해상에서 한미일 훈련을 하며 훈련지역을 “Sea of Japan”이라고 명시한 것에 대해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8월 17일 정례브리핑에서 “다양한 계기에 ‘동해’ 표기에 관한 우리 정부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해왔으며 앞으로도 미측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힘 ← **미 국방부는**

동해 표기에 관한 질문에 “‘일본해’가 공식표기이며, ‘일본해’라고 쓰는 것은 국방부뿐 아니라 미국 정부기관들의 정책”이라고 답변 (JTBC 보도, 8.15)

● 광범위한 국민 여론 수렴과 지지 확보

- 한미일 3국 협력 이니셔티브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론의 광범위한 동의와 지지가 필수적임
-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중국의 위협이 북한처럼 심각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의 절박성/필요성에 대해 상당수 국민들이 의문을 가질 수 있음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익 확보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치밀한 준비

- 3국 협력의 원칙과 방향에 합의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제도와 틀을 갖췄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익이 무엇인가라는 의문이 나올 수 있음
- 정부는 3국 협력을 종합적으로 준비하고 조율하면서 진행상황을 꼼꼼히 점검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 북중러의 반발과 밀착에 대비

- 한미일 3국 협력을 자국에 대한 견제로 인식하는 중국은 북한/러시아와 공조해서 중북러 3각 협력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큼
- 김정은 정권을 정치/외교/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물론 한반도 주변에서 북중러 3국 연합훈련을 실시하는 등 한미일 3국의 군사행보에 맞대응할 것으로 예상됨 ← 이미 중러는 금년 7월 동해에서 '북방합동-2023' 훈련을 실시

●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과 중/장거리 미사일 위협의 우선순위 설정

- 우리의 입장에서는 일본/미국에 도달하는 중/장거리 미사일보다 단거리 미사일이 직접적인 위협이므로, 3국 안보협력이 단거리 핵위협을 막는 데 어떠한 유용성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함 ←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은 남한을 공격하기에 적합한 무기체계가 아님

- 3국 안보협력이 일본과 미국의 안보를 중시한다는 인상을 주는 경우 3국 협력 자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상실될 것임

● 한중관계 관리 및 한중대화 모멘텀 유지

- 한미일 3국 협력이 강화될수록 한중관계를 세심하게 관리해야 필요성이 높아 지므로 한중대화 채널 활성화가 시급한 과제임 ← 3국 협력이 중국과 대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정부의 의지를 입증하는 방법이기도 함
- 아울러 서울 소재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 활성화, 한중일 각료회담과 정상 회담 등을 추진함으로써, 한미일 협력에 비례해서 한중일 협력도 병행 발전 시키는 전략적 균형을 유지해야 함 ← 한중일 협력과 한미일 협력을 동전의 양면처럼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적 마인드가 요구됨 ☺